

스마트폰 비추면 움직이는 작품들... AR 미술관 된 전철역

프로

LGU+ 5G 갤러리

공덕역 5G 기술 결합 갤러리로 24명의 예술가 총 88개 작품 구성 지하철 차량에서도 갤러리 운영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이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결합한 갤러리로 재탄생했다.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3일 공덕역에 5G 기반 문화예술 공간 'U+5G 갤러리'를 개관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시된 작품을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U+AR'로 비추면, 스마트폰 화면 상에 작품이 움직이는 식이다.

예를 들어 정지된 발레리나의 그림을 비추면 U+AR에서 발레리나가 움직이며 공연을 펼친다. 재탄생한 작품을 확대하고 돌려가며 감상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PS부문 황현식 부사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5G 기술과 접목해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



3일 오전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엘지 유플러스·서울교통공사가 개관한 세계 최초 5G 기반 문화예술 공간 'U+5G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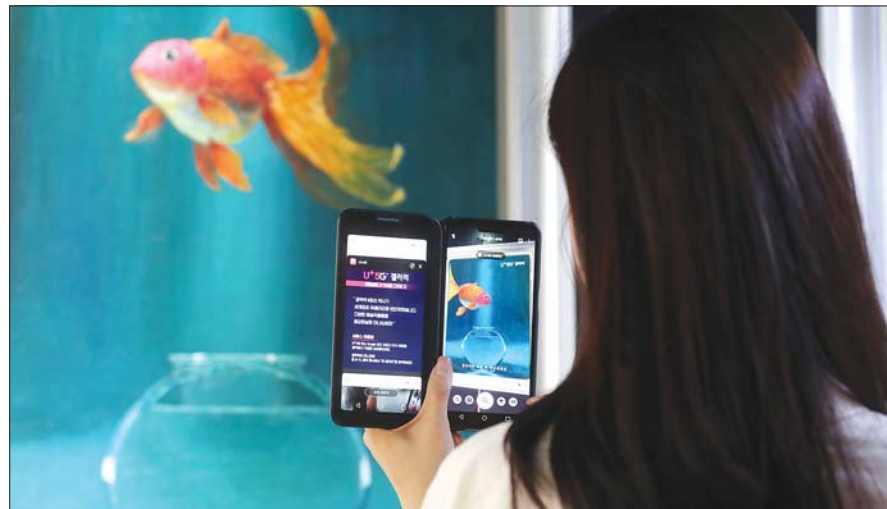
공하고자 6개월을 준비했다"며 "지하철이 갤러리가 되고, 고객들은 5G로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탑승객이 아닌 관람객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5G 갤러리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갤러리' ▲지하철 내부에서 감상하는 '열차 갤러리' ▲이동하며 눈으로 즐기는 '환승 계단 갤러리' ▲환승 거점에서 5G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팝업 갤러리' 등 지하철에 들어와 탑승까지 접할 수 있도록 4개 공

간에 마련됐다. 24명의 예술가가 준비한 총 88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고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는 신제현 작가가 무용수들과 협업한 다원예술인 '리슨 투 더 댄스'(봉화산 방면)와 구축화가 및 서울문화재단 소속 작가들의 회화 작품(응암 방면)을 전시했다.

특히 리슨 투 더 댄스는 무용수들의 멈춰있는 이미지를 U+AR 앱으로 보면, 조선시대 궁중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인 춘앵전의 무보를 듣고 무용



3일 오전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을 지나는 시민들이 엘지 유플러스·서울교통공사가 개관한 세계 최초 5G 기반 문화예술 공간 'U+5G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수들이 새롭게 해석한 동작을 볼 수 있다. 지하철 차량에서도 1편(8량) 전체에 걸쳐 갤러리를 운영한다. 공덕역뿐 아니라 다른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즐길 수 있다.

U+5G 갤러리의 33개 작품에는 구글 렌즈가 적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롱텀 에볼루션(LTE) 고객이나 타사 고객도 U+5G 갤러리를 체험할 수 있다. 구글 렌즈의 파트너사는 국내서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LG유플러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장준영 담당은 "올해 '일상을 바꾼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주목했다"며 "단순 마케팅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LG유플러스의 5G가 더해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U+5G 갤러리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6개월 간 공덕역 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이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국-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서 한국 참가기업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KOTRA, 신산업분야 태국과 함께 걷는다

'한국-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KOTRA(코트라)가 대한상외와 공동으로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지 방문에 맞춰 개최됐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태국은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 '타일랜드 4.0' 계획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산업, 스타트업 및 인적자본 육성,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태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로 도약하려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양국은 상생번영의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는 우선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과 디지털산업 및 스마트 시티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국은 2035년까지 스마트시티 1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DEPA는 태국의 디지털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스마트보안, 스마트교통,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성용 기자 ysw@

ETRI, 소리 이용한 보안 센서 개발

보안 사각지대 해소... 비용도 저렴

소리만으로 무단 침입이나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가 개발됐다.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비용도 저렴해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

소기업 ㈜시큐웍스와 함께 스마트 안전 센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품은 올 9월 중 출시를 예정했으며, 내년부터 시생산을 통해 판매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진출도 준비 중이다. /김재용 기자

"기업 세곳 중 두곳, 日 회사와 신뢰 악화"

'수출 규제 영향과 대응과제'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500개사 조사 조사기업 55% 수출규제 피해 예상 '협력 축소할 것' 응답 절반 넘어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 신뢰를 크게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R&D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6.6%는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일본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안정적인 사업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는 얘기가.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에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면서도 55%가 일본 수출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전화위복을 다짐했다.

단,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기업 55%가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예상했다.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응답도 10.6%나 됐다. 관광(87.8%)과 반도체(85.4%)에서 많았다.

그나마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산업과 기술 교류 간접 부문에서는 각각 48.4%, 34.8%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직접 피해인 대일 수입과 수출에서는 15.8%, 28.8%만이 피해를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더 위협했다. 수출규제에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는 대답은 대기업에서 73%가 나온 반면, 중소기업은 26%뿐이었다.

정부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R&D 세액공제 확대'가 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이 32%, '규제 혁신'이 19.4% 등으로 언급됐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소재와 관련한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와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가 높게 나왔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rk@

코스포, 전동킥보드 이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국내 법률조항 없어 안전규제 전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요청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공유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사용하는 규모도 커져 공유 서비스 기업의 약 10배에 달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법적 근거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외 속도제한·주

행 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는 없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 건수가 2018년 23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